https://doi.org/10.33778/kcsa.2020.20.2.101

9.19 군사합의서의 구성주의적 함의 고찰

이 강 경*, 설 현 주**

요 약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Constructivist Implications of the 9.19 Military Implementation Agreement

Lee Kang Kyong*, Seol Hyeon Ju**

ABSTRACT

Since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and Hanoi,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under way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egotiations are stalled and some skepticism is expected due to the conflicting U.S.-North Korea stance over the terms of denuclearization.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the traditional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formation of a new cold-war system. At a turning point when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ree U.S.-North Korea summits were held in the wak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has become a must-do historical task for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is seen as a historic occasion for presenting a new mileston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Agreement. Meanwhile, Constructivism, which has become the main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presents the view that ideological variables such as ideology, history and culture define material factors, identity and interests of state actors, an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changed through 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which is now past its first anniversary, was considered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sis model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were presented.

Key words : Constructivism, Processes of interaction. Kantian cultur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Military Sector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접수일 (2020년 1월 18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9일)

* 충남대학교 군사학 박사과정

**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신저자)

1. 서 론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채택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위중하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GSOMIA 파기결정과 조건부 연장합의, 중・러의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입 등 안보 불안요인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은 또다시 교착상태에 직면했고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다. 특히 북한은 2018년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단하기로 약속했던 한미 군사훈련이 2019년에 축소된 형태로 재개된 점과 한국 정부의 국방비 인상, F-35기 도입 등 한국군의 군비증강을 이유로 2019년 7월 25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한편 美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8월 초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전통적인 안보딜레마가 존재한다. 즉, 경제적 영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과 같이 다자협력체가 존재하지만 안보적 영역에서는 군비증강과 영토문제 등 구조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 이후에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가 더욱 고착화하고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가되어 온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오늘날 북한의 핵 위협이 보다 현실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북미간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작성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북한 비핵화를 포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를 고려해 볼 때, 9.19 평양공동선언과 같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교류와 협력 등 상호작용을 통해 남북관계의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향후 한반도 문제의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동안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에서 고찰하였다.

2. 구성주의 이론과 분석모델

2.1 선행연구 검토

탈냉전 이후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국제관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기존 패러다임과의 차이점을 비교 및 분석한 이론적 연구와 국제관계 이슈에 관한 사례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이론 연구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현실주의와 탈근대론의 비판(전재성, 2010)[1], 신현실주의에 대한 구성주의의 도전(양준희, 2001)[2], 국제정치 이론 논쟁의 현황과 전망(정진영, 2000)[3],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의미와 한계(신욱희, 1998)[4] 등이다. 국제이슈 관련 사례연구는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주용식, 2012)[5],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성주의(장경룡, 2007)[6], 유럽의 통합과 한반도 통일(이홍종, 2008)[7],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변창구, 2010)[8] 등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남북관계라는 현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핵무력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최근 두드러진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는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구성주의의 적실성을 검토하였고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적용한 국내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 동안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정권교체 이후 핵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연구실적이 다소 둔화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현실주의적인 담론구조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급속한 체제변화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행위자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이론은 향후 의미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1980년대 냉전체제의 평화적인 종식과 세계화의 진전이라는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조주의로 대변되는 국제관계의 주요 패러다임은 변화된 국제질서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비판이론과 탈근대이론, 구성주의와 같은 다양한 성찰주의적 이론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9]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성주의 이론은 최초 인지심리학에서 발전된 이론으로서 '지식이란 존재와 동떨어진 객관적 실재가 아니고 인간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성하는 주관적인 산물'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개념은 교육학과 문화예술, 과학철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로 파급되었다. 특히 국제정치학은 각 시대별 대논쟁(Great Debates)을 거치며 학문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또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합리주의와 성찰주의간 논쟁에서 가교역할을 시도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10]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개념은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1989년, 니콜라스 오너프(Nicholas G. Onuf)가 소개하였고 1992년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E. Wendt)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성주의 이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입장과 철학적 관점 등에 의거하여 다양한 이론으로 발전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오너프와 웬트 외에도 존 러기(Jojn G. Ruggie), 크라토크빌(Friedrich Kratochwil), 이매뉴얼 아들러(Emanuel Adler)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을 통해 故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신현실주의를 비판한 알렉산더 웬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웬트는 왈츠가 간과했던 국제정치의 사회적·관념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국제체제와 개별 국가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왈츠의 이론을 보완하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여 이론적 발전에 기여한 학자로 평가받는다.[11]

구성주의 이론의 가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구조를 물질적 변수가 아닌 관념적 요인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왈츠의 신현실주의는 국제구조를 이른바 '무정부상태'라는 고정변수와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로 상징되는 물질적 변수로 파악했다. 하지만 웬트는 국가행위자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며, 상대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대감 등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속에서 국제구조를 이해한다고 보았다.[12] 즉, 왈츠의 신현실주의가 중시하는 '힘의 분포'가 아닌, 개별 국가행위자들이 새롭게 정의하는 '관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 무정부상태를 <표 1>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상대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무정부상태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1> 무정부상태의 3가지 유형

구 분	상대국 인식	상대국과의 관계	무력사용의 수준
홉스적 문화	적	적대관계	무제한적
로크적 문화	경쟁자	경쟁관계	제한적
칸트적 문화	친구	우호관계	불사용

* 출처: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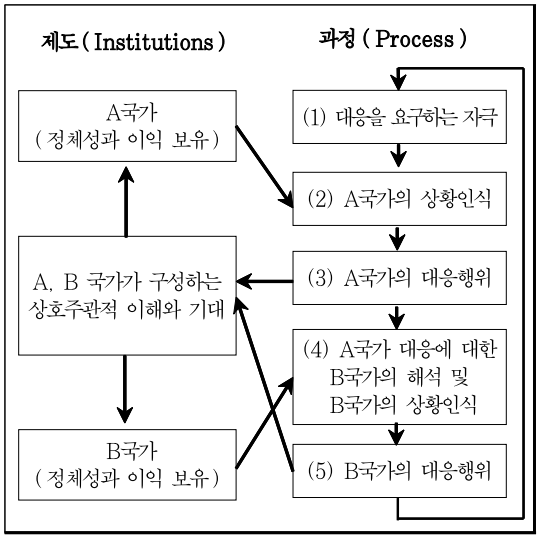
알렉산더 웬트는 무정부상태의 3가지 유형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위협의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인지현상은 영국과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 주변국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과 기대심리 등 관념적 요인이 상이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다시말해 국가행위자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힘과 이익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변수는 중요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입장이다.

두 번째 핵심가정은 국제체제에서 국가행위자와 구조는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개별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이 국제구조로부터 구성되지만, 동시에 개별국가들도 국제체제의 특성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왈츠의 구조적 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가 힘의 분포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구조화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웬트는 무정부상태라는 것이 개별국가의 속성과 정체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즉, 국제구조와 개별국가가 서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구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의지에 따라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는 홉스적 문화에서 로크적 문화, 나아가 칸트적 문화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정은 국제체제에서 개별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은 상호작용의 과정속에서 형성되며 정체성과 이익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웬트는 국제체제의 모습과 맥락(context), 사회적 구성(Social cofigurations)이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행위자들의 인식수준과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되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13] 구성주의적 분석모델에서 강조하는 상호작용은 <표 2>와 같이 웬트가 제시한 '제도와 과정의 공동(상호)결정 모형'에 잘 나타나 있다.

<표 2> 웬트가 제시한 '제도와 과정의 공동 결정' 모델



각 국가행위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개별 정체성과 이익을 토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행동을 취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행위는 개별 국가들의 상호주관적 이해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체성과 이익을 변화시킨다.

본 논문은 현실화된 북핵위협과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구성주의 이론과 분석모델, 남북관계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적 함의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3. 남북관계의 발전과정 고찰

3.1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와 교훈

지난 20년간 남북관계는 진보와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상이한 대북정책으로 '화해와 협력, 갈등과 대립'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고,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냈다. 최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전환기적 시점에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1·2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교훈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성과와 교훈

구분	6.15 남북정상회담 ('00.6.13~6.15)	10.4 남북정상회담 ('07.10.2~10.4)
주요 성과	• 6.15 남북공동선언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1국가 2체제 통일방안 협의 - 경제협력 - 이산가족 상봉 - 상기 사항 준수를 위한 노력	• 10.4 남북공동선언 - 6.15 공동선언 적극구현 - 사상·제도에 대한 상호존중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 9.19·2.13 합의이행 노력 - 지속적인 정상회담 개최 등
의의	• 분단이후 최초의 정상회담 • 화해협력,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전환	•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합의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교류사업
한계	• 임기말 개최로 성과 제한 • 대북송금 의혹, 특검도입	• 임기말 개최로 성과 제한 •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파문

지난 2008년에 보수정권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로 이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3대 세습체제를 완성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연결된 문제라는 연계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대화와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기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2017년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공식 선언하였고 한반도에는 북핵 위협이 현실화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재개되었고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고, 9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3.2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및 평양정상회담의 성과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도보다리 회담'으로 상징되는 4.27 남·북 정상회담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한 층 높여주었다.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美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양국의 정상이 새로운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의 촉진 등 포괄적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이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美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전쟁위협까지 불사했던 북미정상이 관계개선과 함께 비핵화 노력을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66년간 군사적 대립을 이어온 한반도에는 고착화된 안보딜레마와 북핵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신고 및 검증방식을 둘러싼 북미간 이견과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현재까지 커다란 진전없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봉착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체제라는 특수한 분단상황 하에서 남북은 이념적·군사적 대립을 이어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공산권은 몰락했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핵위협을 키워왔고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더욱 현실화되었다.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대화·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했지만, 결국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고 평화체제 구축에도 실패했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면서 남북간 군비경쟁은 보다 심화하였고 한반도에는 안보딜레마가 더욱 고착화되었다. 따라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4.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

4.1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안보적 의미

'도보다리 회담'으로 상징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는 '①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발전, ②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③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싱가폴에서 개최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판문점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①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②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 ③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9.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역사적인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와 전쟁위험, 적대관계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함으로써 상호 적대행위 종식과 전쟁위험 제거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반응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한국정부에 부여된 중재역할의 중요성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즉,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과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는 주한미군 출신의 예비역 장교이자 현재 워싱턴 소재의 민주국방재단에서 활동중인 데이비드 맥스웰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목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트럼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인용하며 미국내 보수층의 목소리를 보도했다.[14]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확약(確約)’하였고, 이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이틀째인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15만 평양시민이 운집한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화 새로운 미래, 그 둘째날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15] 이처럼 파격적인 대중연설이 가능했던 것은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부속합의서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② 비무장지대내 GP 상호철수, ③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④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포병사격 훈련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지, ⑤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다. 이러한 실효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그 동안 군사적으로 갈등상황이 지속되었던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접경지역이 평화지대로 전환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물론이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전쟁의 위험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단계적인 군축협의와 다양한 군사분야 현안에 대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원칙대로 준수된다면 안정된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이 지향하는 ‘핵무기와 전쟁위험, 적대관계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립 속에서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평화정착과는 반대의 대척점에 있었지만, 지나온 합의의 역사는 현재의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성사된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전략대로일지라도 남북간 합의를 이루었던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 개최된 노무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견고하게 주장하는 합의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합의를 확장해 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4.2 남북관계의 발전적 논의과정에서 구성주의 이론의 적실성

알렉산더 웬트의 구성주의는 그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1992)이 상징하듯,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은 국가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웬트는 현실주의의 핵심가정인 무정부상태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제로 그들이 제시하는 개념은 구성원으로서의 국가별 속성과 국가들간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16] 특히 구성주의는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이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구조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웬트는 사회적 구조를 ‘관념의 분포’ 또는 ‘지식의 축적물’로 간주했고 구체적 유형으로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과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관행(Practice)’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구조는 부분적으로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s), 기대(Expectations) 또는 지식(Knowledge)에 의해 정의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국제관계에서 협력과 갈등의 본질을 형성한다고 보았다.[17]

특히 국가행위자들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홉스적・로크적・칸트적 문화를 구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웬트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느낌(we-feeling), 연대(solidarity)' 등 집단적 정체성이 집단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기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구성주의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상호의존과 공동운명, 동질성, 자기억제'라는 변수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18] 상호의존이란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공동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관계를 의미하며, 공동운명이란 관련된 국가별로 국익의 방향이 동일하여, 외부의 적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또한 동질성이란 관련 국가 구성원들이 상호 이해할 수 있으며, 동조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억제란 국가나 국가의 구성원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스스로 통제하고, 타국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기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웬트는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변수, 즉 상호의존과 공동운명, 동질성이 증가할수록 개별 행위자들이 이기적 경계를 허물고 타자를 수용하게 된다고 보았다.[19] 단, 한 가지 조건은 자아가 물리적・심리적으로 흡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될 때, 즉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타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기억제는 정체성 형성의 동인(動因)은 아니지만 상대 행위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게 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웬트는 자기억제의 3가지 방안으로 '안보공동체와 국내정치',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했을 경우의 '자기구속'을 제시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9.19 군사합의서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웬트가 제시한 정체성 형성의 4가지 변수로 해석하면 <표 4>와 같다.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적 완성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다. 이후 3차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차 핵실험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북한의 대내외적 동향은 체제내부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원하고 있으며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웬트의 구성주의는 탈냉전 이후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이 갖는 함의는 크다고 하겠다.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정체성과 이익'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현재의 신냉전적 구조(홉스적 문화)를 평화체제(칸트적 문화)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평양정상회담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핵무기와 전쟁위험, 적대관계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표 4> 9.19 군사합의서의 구성주의적 함의

구분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구성주의적 함의
상호의존 / 상호작용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 ・무력 불사용 원칙 합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협의 ・단계적 군축의 실행 대책 협의 ・서해 평화수역 조성 * 우발적 충돌방지, 공동순찰 등	・적대행위 종식, 전쟁위험 제거 ・상호불가침 합의, 안보불안 해소 ・적대관계(홉스적 문화)의 해체 ・평화적 관계(칸트적 문화) 구축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촉진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공동운명 / 동질성	・DMZ 공동유해발굴, 지뢰제거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 및 통관 보장 - 철도・도로 협력의 군사적 보장 -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보장	・협력적・상호주의적인 공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 발견 및 이익공유 ・평화적인 상호작용의 제도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적 지원 ※ 조화적인 집단정체성의 형성
자기억제	・지・해상 작전시 우발충돌위험 방지 * 4・5단계의 공통절차 적용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GP 철수, JSA 비무장화	・상호 오판가능성에 의한 갈등방지 ・무력충돌 및 도발의 선제적 예방 ・위기관리 시스템의 제도화 ※ 새로운 행동・절차규범의 정립

4.3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구성주의적 해석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의심할 여지없이 홉스적 문화의 전형(典型)을 보여주었다. 동・서독의 통일과 舊 소련이 붕괴된 탈냉전 이후에도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현실화하였고 체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했다. 특히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 북한은 체제유지와 내부결속, 대외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핵개발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체제변화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평화・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현재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들은 한반도 안보환경을 '홉스적 문화'에서 '칸트적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상호작용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웬트는 일단 칸트적 문화가 형성되면 로크적 문화로 다시 후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9.19 평양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안보불안이 고착화된 한반도에 칸트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사적 시도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알렉산더 웬트와 함께 대표적인 구성주의 학자로 손꼽히는 이매뉴얼 아들러(E. Adler)는 '군비통제와 협력적 안보'라는 관행이 그 자체만으로는 평화를 조성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20] "① 상호 친밀성과 공동의 이익을 식별하도록 돕는 의사소통 과정의 촉진, ②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안보공동체의 발전과 연계된 거래・제도・학습체계의 발전을 촉진, ③ 평화적 변화가 보장되는 지역에서 불안정성과 침략적 관행의 확산 억제." 따라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아들러가 제시한 '군비통제와 협력적 안보' 차원의 합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웬트는 "홉스적 문화에서는 안보딜레마에 보다 취약할 수 있으며, 일방의 군비증강이 상대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여 상호불신과 소외를 영구화시킨다"고 강조했다.[21] 또한 '상호작용의 과정과 구조적 변화'를 논하면서 의사소통의 2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그것은 바로 '행동과 수사(Behavioral and Rhetorical)'에 관한 것이다. 즉, '협력적 행동(Acts of cooperation)과 수사적 관행(Rhetorical practice)'이 반복될 때 개별 국가행위자들은 상호 기대감과 정체성을 갖게 되고 연대(Solidarity)하게 된다는 것이다.[22]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효적 조치들을 합의하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의 상호작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다양한 군사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점도 '협력적 행동과 수사적 관행'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주의 이론은 최근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를 고려시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의미한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남북간의 상호 정체성과 이익은 언제든지 새롭게 정의될 수 있고 가변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특수한 안보환경에 놓인 남북관계의 논의과정에서 구성주의는 아직까지 실천적 영역이 아닌 해석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접근법으로 판단된다.

웬트는 국가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 동안 남북 당국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제시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에 북미간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직면했고 미중간 무역전쟁의 격화로 대화의 동력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라는 두 개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미국과의 대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의 정체성과 이익을 새롭게 규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 정부의 중재를 통해 북미간 대화에 나서기 보다는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의 논의과정에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취약성을 갖는다. 먼저 구성주의 이론이 강조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정체성과 이익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은 남북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고 매우 복합적이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같은 주변 열강의 패권경쟁에서부터 동맹관계, 지역내 군사적 갈등, 개별국가들의 국내 안보상황과 전략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국가정체성과 이익은 항상 가변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가 중시하는 2가지 의사소통 기재인 '협력적 행동과 수사적 관행'은 반드시 합의와 실천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입장에서 핵이 갖는 의미는 매우 복합적이다. 북한 정권에게 핵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상징가치', '군사적 사용가치'를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23] 따라서 북한체제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비핵화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는 신현실주의에서 중시하는 물질적 변수를 개별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념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국제관계의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이다. 알렉산더 웬트는 "사회적 구조가 오직 과정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과거 냉전은 40년 동안 강력한 권력 관계를 지배했던 공동 지식의 구조(Structure of shared knowledge)였지만, 행위자들이 이를 근거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끝이 났다"고 평가했다.[24] 또한 "안보딜레마는 신의 행위가 아니고 실천의 효과(Security dilemmas are not acts of God: they are effects of practice)"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와 같이 웬트가 제시한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분단체제를 유지해온 한반도에 냉전적 사고가 뿌리깊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남과 북이 공동의 정체성과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안보딜레마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한반도에 칸트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오랫동안 현실주의 담론이 지배해온 남북관계에 희망적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알렉산더 웬트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여전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성주의 이론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동북아 지역갈등의 주요 원인이 신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물질적 요인보다는 이념, 문화, 역사 등의 관념적 요인들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웬트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구조의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정이 수반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이론적 한계도 갖는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민족사적 의제이다. 또한 현재의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이질화된 이념적·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간극을 좁혀가야 하는 역사적 의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구성주의의 이론적 설명력은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現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시 9.19 평양 공동선언이 안보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이정표를 제시해 준 평양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군사적 의미를 국제정치이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함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항들이 아직까지 실천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역사적 평가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정에 대한 분석과 전망,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현실주의와 탈근대론의 비판”,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2호, 2010.

[2] 양준희, “왈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집, 제3호, 2001.

[3]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 논쟁의 현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3호, 2000.

[4] 신욱희,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1998.

[5] 주용식,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2012.

[6] 장경룡,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성주의”, 정치정보연구, 제10집, 제2호, 2007.

[7] 이홍종, “구성주의 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 통일”, 한국동북아논총, 제48호, 2008.

[8] 변창구, “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2호, 2010.

[9]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2009.

[10], [12], [13], [21]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pp. 394-406, 1992.

[11]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한울, 2014.

[14] The Washington Post, “Koreas summit kick-starts stalled nuclear talks with US”,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ready-to-engage-immediately-with-north-korea/2018/09/19/d9737ab8-bc42-11e8-8243-f3ae9c99658a_story.html?utm_term=.ddbf4c3a8a16(검색일: 2018년 9월 26일).

[15] 청와대, “평화, 새로운 미래 그 둘째날”,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335 (검색일: 2018년 9월 26일).

[16], [19] Alexander Wendt, 박건영 외 3명(역),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사회평론, 2009.

[17], [24]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Summer), pp. 73-81, 1995.

[18], [22]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June), p. 386, 1994.

[20] Emanuel Adler, “Condition(s) of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p. 185, 1998.

[23] 문인철,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인지심리학적 의미”,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2호, p. 27, 2018.

〔저자소개〕

이 강 경 (Kang-Kyong Lee)
1998년 2월 육군사관학교 학사
2007년 2월 고려대학교 석사
現 육군 군수사령부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email : kangkyonglee@gmai.com

설 현 주 (Hyeon-Ju Seol)
1993년 3월 공군사관학교 학사
1996년 2월 서울대학교 학사
1999년 2월 서울대학교 석사
2007년 2월 서울대학교 박사
現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email : hjseol@cnu.ac.kr